

# 尹 “의료·연금개혁” 의지 보였지만... 여전히 안갯속

윤석열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료·연금개혁 완수를 재차 강조했다.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미래 세대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 표명이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이 9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또한 구체적인 돌파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7년 만에 추진 중인 연금개혁 또한 국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국무총리 대독)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의료계 대화협의체 출범 지연 연금개혁 논의도 없어... 올해 국회 통과는 힘들 듯

과제를 마련했다”며 “당면한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 간 30조원 이상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정쟁 정국 속에서도 정부는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다만 이날

연설문에서도 개혁 의지만 드러냈을 뿐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의 의지와 달리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라 의료개혁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올해 9월 시행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 합격자는 268명으로 지난해(3069명)의 8.6% 수준에 그치면서 내년 의사 배출도 차질이 우려된다. 여기에 내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료 현장과 학교로 복귀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개혁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출범 역시 미뤄지는 모양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

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다른 의대 교수 단체들은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 정상화의 열쇠를 권 전공의와 의대생들 또한 끄떡하지 않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출범 자체가 뒤로 밀릴 가능성도 나온다.

출범하더라도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다가 전공의, 의대생 설득 문제도 남아 있어 갈등 해소까지는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개혁 관련해서도 올해 국회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두 달 동안 여야 간의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2%로 유지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중장년과 청년층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대별 보험료를 다르게 하고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인상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장 연금개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논의할지 별도의 협의체를 꾸릴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세대별 보험료를 차등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 간의 입장차도 커 합의안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정기국회 내 연금개혁 여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무조건 정기국회 안에서 마무리하자고 하면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합의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뉴시스



권요안 전북자치도의원

## 화훼산업 발전 공로 감사패

전북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원주2)이 지난 1일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로부터 화훼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이기성 회장은 시상식에서 “권요안 의원은 최근 꽃소비 저조와 수출감소로 농가의 의욕이 감소한 실정에서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하고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꽃소비 저변 확산을 위해 헌신해 오셨기에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제12대 전북자치도의회 전반기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해 플라스틱 조화(造花)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후반기에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최근 난방비와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 부담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화훼농가를 살리고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요청하는 등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만호 기자

# “한인비즈 사후관리 철저”

김관영 도지사, 대회 역대급 성과에 감사 인사  
내년 국가예산 확보 국회단체 총력 대응 주문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대입 수능 대비 지원 당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간부회의에서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역대급 성과는 도민의 열원과 모든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대회 성과가 참여기업들의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주문하면서 “상당실적이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계약 추진상황을 매주 점검하여 애로사항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도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지시했다.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업무를 철저히 살피서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서간 업무조정 등을 통해서 업무가 실기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지사는 “본격적인 국가예산 국회단체에 진입함에 따라 실국별, 시군별 국가예산 대응활동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컨

트론타워를 구축하여 전방위적 국가 예산 확보 활동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8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에 대해 사전에 의원들과 적극적인 소통 강화하여 쟁점을 해소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준비하여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지사는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산에 대비해 “도내 가금농가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농장주와 종사자들에게 철저한 차단 방역 수칙을 안내해 확산 방지에 주력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수능 당일 교통소통과 소음방지 대책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도청 직원 자녀 중 수험생 대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라고 지시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한인비즈·JB-FAIR 성공적 안착 위해... 수출기업 교류회

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JB-Fair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수출기업 교류회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JB-Fair에 참여한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전문가 컨설팅과 수출기업 교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文정부 행정관 “압수수색 부당”

### 대법원, 재항고 기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직 행정관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준항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일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

### 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에서 준항고가 인용될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 처분이나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지난 5월 신 모 전 행정관의 주거지와 휴대

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신 전 행정관은 검찰이 휴대전화 연락처 일체를 압수한 것이 부당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지난 7월 18일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결론은 같았다. /뉴시스

## 전북자치도의회 경산건위

### 행감·예산심사 앞두고 연찬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오는 8일 개최하는 제415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감사 방향 설정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의 사전 분석을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년 실·국별 주요 현안 및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정취한 후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간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의 쟁점 사항 및 질의 방향을 검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위원회는 고창으로 이동해 수산·어업 종사자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논의했고, 다음날은 제조현장 혁신활동 사업이 추진 중인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시찰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